

# 스웨덴의 혐오표현 규제와 위협받는 민주주의

김민주 스웨덴 룬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석사과정



## 들어가며

올해 초 스웨덴에서는 91살 남성이 무슬림을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 그룹에 올렸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2,000명의 멤버가 있는 페이스북 그룹에 “무슬림은 근친 교배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고 이 글은 51주 동안 게시되었다. 크리스티안스타드 지방법원은 이 발언을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조건부 형과 함께 6,500 크로나(약 70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Bergquist, 2019).

같은 해 6월, 52살 패트릭 마크스트룀(Patrik Markström)씨도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룹(Stå Upp För Sverige)에 게시된 인종 차별적 발언의 댓글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크스트룀씨는 댓글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에스킬스투나 지방법원은 논란이 된 총 8개의 댓글 중, 6개의 댓글은 보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낮고, 나머지 2개의 댓글은 보고도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행유예와 19,200 크로나(약 2,070 달러)를 벌금으로 선고했다(The Local, 2019).

최근 스웨덴은 위와 같이 혐오표현 관련 범죄가 급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웨덴의 한 미디어 조사기관<sup>1)</sup>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혐오표현 범죄의 수가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미 2017년에만 페이스북 내 혐오발언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 18건이었고, 그 수가 2013년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atterjee & Törnkvist, 2018; Daily Sabah, 2019).

이처럼 스웨덴 내 혐오표현이 최근 들어 급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혐오표현이 급증하게 된 배경,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정책적 규제,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스웨덴의 사례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스웨덴에서 혐오표현이 성행하게 된 배경

스웨덴 내 혐오표현이 급증한 데는 2015년에 있었던 난민위기로 인해 확산된 반(反)난민, 반(反)이민정서<sup>2)</sup>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은 친(親)난민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국가들 중 자국민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sup>3)</sup>가 되었다. 그러나 명확한 대책 없이 난민을 수용한 나머지 난민범죄와 테러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망명을 거부당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남성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중심가에서 일으켰던 트럭 테러 사건은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옥기원, 2018). 이와 같은 부정적 상황들이 발생하자 민족주의적 성향의 네오-나치를 지지하는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노르딕 저항운동(Nordic Resistance Movement)이 나라 전체에 일어나고,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 제3당을 차지했다.<sup>4)</sup> 한 조사<sup>5)</sup>에 따르면 2016년에 일어난 네오-나치의 활동은 3,064회로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정도였다(김병수, 2017). 이에 세금이 난민정착비용으로 이용되어 스웨덴 복지 시스템이 위태로워진대거나, 무슬림이 스웨덴 인구의 반을 장악할 것이라는 등의 허위정보와 가짜뉴스<sup>6)</sup>까지 더해져 스웨덴 국민들의 반(反)난민·반(反)이민정서는 더욱 고조되었다(Regeringskansliet, 2017).

1) Nätshatsgranskaren (URL: <http://xn--nathatsgranskaren-vnb.se/>)

2) 스웨덴 내 소셜미디어 혐오표현 조사기관(Nätshatsgranskaren)의 장 토마스 아베리(Tomas Aberg)에 따르면, 혐오표현관련 범죄의 50%는 무슬림, 22%는 망명신청자, 21%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다(Daily Sabah, 2019).

3) 옥기원(2018)에 따르면, 스웨덴은 인구가 약 1천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인데,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16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해 자국민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4) 이영희(2018)에 따르면, 스웨덴 민주당은 2018년 총선에서 2014년 총선에 비해 약 5% 높은 득표율을 보여 제 3정당이 되었다.

5) 스웨덴의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재단인 엑스포(Expo)가 2017년 발표한 연례보고서(김병수, 2017).

6) 스웨덴은 2015년 난민 위기로 인해 가짜뉴스 또한 성행했다. 2018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성행한 나머지 “유럽에서 가짜뉴스를 많이 공유하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또한 가짜뉴스의 40%가 스웨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반난민주의, 반이슬람주의를 조장하는 글이었다(Hedman et al., 2018; “Surge in fake Twitter accounts”, 2018).

## II.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정책적 규제

그렇다면 스웨덴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스웨덴은 형법(16.8장)<sup>7)</sup>을 통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에 기반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혹은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한다(Emma, 2018).<sup>8)</sup>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보호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유럽연합(EU)의 형법에 근거해 외국인 및 인종 차별과 관련된 혐오표현과 특정 행동 또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Catovic, 2014).

법적인 규제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 먼저 혐오표현 근절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총 750만크로나(807,150달러)를 받아 막대한 예산을 할당했다(Harper, 2019).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sup>9)</sup>에 대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시각을 증진시키기 위해 페미니스트 정책과 같은 공공기관의 반차별 교육정책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 국립미디어위원회(Swedish Media Council)에서는 2020년말까지 “노 헤이트 스피치 운동(No Hate Speech Movement)”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성차별,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장애인 비하 발언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공식 홈페이지(www.nohate.se)에 혐오표현의 정의와 캠페인에 대해 소개하고 교사와 부모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 가이드 자료집’을 배포했다. 더 나아가 학교 차원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교육을 강화해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을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Regeringskansliet, 2018; Statens medieråd, n.d.).

또한 스웨덴 경찰은 스웨덴 국방 연구청(Swedish Defense Research Agency, FOI), 읍살라 대학교와 협업하여 온라인 내 혐오표현, 사이버폭력, 인종차별을 일으키는 선동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자동혐오탐지장치(hate-detecting machine)<sup>10)</sup>’를 개발했다. 뉴스메이커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이 알고리즘은 현재 스웨덴어로만 가능하며, 선임연구원들이

7) 스웨덴은 1948년부터 특정 국가 혹은 민족 집단에 대한 선동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시간이 흐르며 집단의 범위는 점차 확장되어 현재의 법이 만들어졌다. 그 중 ‘트랜스젠더’ 항목은 올해 1월부터 추가되었다(Battle of ideas, 2017; Emma, 2018).

8) 스웨덴 형법 16.8장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Emma, 2018). “Any person who, in a statement or in another shared message, threatens or expresses contempt for a community or other such group of people on the basis of race, skin colour, national or ethnic origin, creed, sexual orientation or trans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is convicted of hate speech to imprisonment for a maximum of two years or, if the offence is minor, to a fine. “If the offence is severe, the offender is convicted of aggravated incitement to hatred to imprisonment for a minimum of six months and a maximum of four years.”

9) 대표적으로는 스웨덴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스웨덴 인터넷 재단(Internet Foundation in Sweden, IIS)’과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안전한 서핑(Safe Surfing)을 장려하고 인터넷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퍼뜨리는 ‘Jag är här’ (<https://www.jagarhar.se/>)라는 단체가 있다(Regeringskansliet, 2018).

10) 필자 번역. 웹사이트(<https://hatomaten.com/>) 방문 시, 로봇 모양 아이콘이 “나는 혐오를 먹습니다( eat hate)”, “혐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thanks for your hate)” 등의 인사말로 사람을 맞이한다(Sputnik, 2019).

다양한 혐오표현 샘플들을 이용해 개발 중이다. 스웨덴 국방 연구청(FOI)은 “이 장치를 통해 범 강화를 돕고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위협 및 폭력 등을 탐지해 좀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혐오표현 근절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Sputnik, 2019).

〈그림 1〉 스웨덴 국립미디어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관련 자녀 교육 가이드.  
우측 하단에서 ‘노 헤이트 스피치 운동’ 로고를 볼 수 있다 (Statens medieråd, n.d.).  
〈그림 2〉 스웨덴 경찰이 공동연구로 개발한 ‘자동혐오탐지장치(hate-detecting machine)’



### III.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논란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스웨덴의 다양한 노력은 무슬림, 유대인, 난민, LGBT<sup>11)</sup> 등의 사회적 소수집단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혐오표현 범죄의 대부분이 이들을 겨냥하기 때문에 강력해진 규제가 그들의 인권 신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Chatterjee & Törnkvist, 2018; Daily Sabah, 2019). 특히 시민단체 성평등연합(The Swedish Federation for LGBTQ Rights)은 올해 1월부터 “트랜스젠더 정체성 혹은 표현”이라는 항목이 혐오표현 관련 법에 추가된 것에 대해 “트랜스젠더의 존재와 현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Fria Tider, 2018; Emma, 2018 재인용; RFSL, 2018).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혐오표현 규제가 국가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지

11)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소수자를 의미한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17).

나친 규제로 오남용되어 표현의 자유<sup>12)</sup>가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 정부기관 대외홍보처(Swedish Institute)가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Sweden)이 급증한 인종차별과 성차별주의자들의 악성 댓글을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유저 14,000명을 차단한 블랙리스트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온라인 보안 전문가이자 해당 트위터 계정의 운영자인 비안 타히르(Vian Tahir)는 “혐오표현 규제를 목적으로 이민자, 여성, 성 소수자(LGBTQ)들에게 위협적이거나, 극우주의 혹은 네오-나치즘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저들을 차단한 것”이었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이 리스트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가 말한 어떠한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이스라엘 주 스웨덴 대사, 빌게이즈 등과 같은 유명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해명은 충분치 않았다(The Local, 2017; RT News, 2017 재인용). 많은 사람들이 한 기관의 임의적인 판단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관리를 당했고 그 리스트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것 또한 더해져 더욱 공분을 샀다. 결국 스웨덴 대외홍보처는 공식 사과와 함께 14,000명 유저들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미 여론은 싸늘해진 뒤였다. 정치계 논쟁가 로렌 서던(Lauren Southern)은 “정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의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목적을 비판했고, 이를 가리켜 “사상경찰(thought police) 또는 전체주의”에 비유하는 시각까지 나오기도 했다(RT News, 2017; Sputnik, 2019).

혐오표현 규제가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7년 달라르나(Darlarna)에 거주하는 70세의 여성이 “이민자들이 거리에 대소변을 보고 차에 불을 지른다”라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인종 차별적인 발언으로 기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 여성에게 4년 감옥형을 선고한 반면, 같은 해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남성을 죽기 직전까지 폭행한 2명의 이민자들에게는 4년 이하의 감옥형을 내려 논란이 있었다. 당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타인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한 중범죄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주의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Curl, 2017). 스웨덴의 이러한 행보들은 약 250년 전 세계 최초로 출판언론자유법을 도입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던 ‘모범적 민주주의의 국가’ 이미지와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인다(Carlsson & Weibull, 2018; Catovic, 2014; Regeringskansliet, 2016).

12) 스웨덴에서 ‘표현의 자유’는 크게 헌법(The Instrument of Government), 표현의 자유법(The Freedom of Expression Act), 출판언론 자유법(The Freedom of Press Act) 이 세 가지 법에 근거하여 보장받는다. 각각의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모든 사람은 말, 글, 그림의 형태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전달 및 획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Carlsson & Weibull, 2018; Catovic, 2014; Regeringskansliet, 2016).




## 나가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64%가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이병훈, 2019). 이에 지난 8월, 법무부는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을 열어 혐오표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했는데 혐오표현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법을 개정해 사법적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sup>13)</sup>이 주를 이뤘다(강석영, 2019).

그러나 우리는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혐오표현 규제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공권력이 악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법적 규제 강화에 앞서 그것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선행했는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이미 ‘명예훼손 죄와 모욕죄’,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 ‘준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표현 및 차별을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혐오표현 관련 법까지 생겨난다면 ‘위축효과(the chilling effect)’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과도한 공권력을 의식해 표현에 대한 자기검열과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

13) 특히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성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혐오표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강석영, 2019).

국 진정한 평등을 위한 혐오표현 규제가 민주주의의 뿌리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백상현, 2018; 한명진, 2017; 최란, 2018 재인용).

혐오표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어떠한 계기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역사와 구조 속에 오랫동안 깊게 뿌리내렸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혐오표현 확산의 주 요인으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차이(77.4%)”가 꼽힌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법적 규제 강화를 논하기 보다는 ‘편견 및 차별’ 해소에 초점을 두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백상현, 2018; 이병훈, 2019; 최란, 2018). 

#### 참고문헌

- 1) 강석영 (2019.09.02) '맘충' 여성 혐오표현, 어디까지 처벌해야 할까? <민중의 소리>. URL: <https://www.vop.co.kr/A00001432296.html>
- 2) 김병수 (2017, 5, 7). '네오-나치' 활동 왕성해지는 스웨덴...작년 3천건 넘어.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7069600098?input=1195m>
- 3) 김현경, 박보람, 박승환 (201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공익과 인권>, 12, 215-249.
- 4) 백상현 (2018, 3, 8). [혐오표현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정당한 표현조차 스스로 입 달을 가능성. <국민일보>. UR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5&aid=0001079244>
- 5) 옥기원 (2018, 9, 10). 불안 자극한 '난민 공포'...북유럽 복지국가마저 '극우 소환'.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61490.html>
- 6) 이병훈 (2019, 8, 27). 성인 64% '혐오 표현' 경험...“2030세대 경험 두드러져”. <파이낸셜뉴스>. URL: <http://www.fnnews.com/news/201908271428112209>
- 7) 이영희 (2018, 9, 10). '난민 문제' 이슈 된 스웨덴 총선서 극우정당 약진. <중앙일보>. URL: <https://news.joins.com/article/22955805>
- 8) 최란 (2018).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권권>, 제4권 제2호, p.47-86.
- 9) Battle of ideas (2017, November 18) HATE SPEECH AND DEMOCRACY: SHOULD WE TOLERATE THE INTOLERANT?. *Battle of ideas*. Retrieved from <https://www.battleofideas.org.uk/2017/session/hate-speech-and-democracy-should-we-tolerate-the-intolerant/>
- 10) Bergquist, A. (2019, March 27). 91-year-old convicted of Islamism on Facebook. *Lokaltidningen*. Retrieved from <http://www.lokaltidningen.se/2019-03-27/-91-%C3%A5ring-d%C3%B6md-f%C3%B6r-islamhets-p%C3%A5-Facebook-4517470.html>
- 11) Carlsson, U., & Weibull, L. (2018).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Media Culture: A study of public opinion in Sweden*. Nordicom.
- 12) Catovic, E. (2014). A right to hate: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roach to hate speech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 13) Chatterjee, P., & Törnkvist, A. (2018, January 3) Rise in online hate speech convictions. *SVERIGES RADIO*. Retrieved from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6854360>
- 14) Curl, J. (2017, May 4) Woman, 70, Says Migrants Defecate in Streets, Set Cars on Fire. Cops Charge Her with Hate Crime. *The Daily Wire*. Retrieved from <https://www.dailywire.com/news/16409/woman-70-says-migrants-defecate-streets-set-cars-joseph-curl>
- 15) Daily Sabah. (2019, April 18) Online hate crimes doubled in Sweden in 2017-18, half targeting Muslims: report. *Daily Sabah*. Retrieved from <https://www.dailysabah.com/islamophobia/2019/04/18/online-hate-crimes-doubled-in-sweden-in-2017-18-half-targeting-muslims-report>
- 16) Emma, R. (2018, December 31). New hate speech law in Sweden - From January it will be illegal to speak ill of transsexuals. *The Voice of Europe*. Retrieved from <https://voiceofeurope.com/2018/12/new-hate-speech-law-in-sweden-from-january-it-will-be-illegal-to-speak-ill-of-transsexuals/>

- 
- 17) Harper, C. (2019, April 1). 91-year-old man in Sweden convicted of "hate speech" for his Facebook post. Reclaim the net. Retrieved from <https://reclaimthenet.org/91-year-old-man-in-sweden-convicted-of-hate-speech/>
- 18) Hedman, F., Sivnert, F., Kollanyi, B., Narayanan, V., Neudert, L., & Howard, P. N. (2018). *News and Political Information Consumption in Sweden: Mapping the 2018 Swedish General Election on Twitter*. Data Memo 2018.3, Oxford, UK.
- 19)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7.12.07). 시사상식사전. Retrieved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44&cid=43667&categoryId=43667>
- 20) Regeringskansliet (2016, December 2) Pioneering Freedom, Retrieved from <https://www.government.se/opinion-pieces/2016/12/pioneering-freedom/>
- 21) Regeringskansliet (2017, March 20). Så ska vi skydda valrörelsen från andra staters påverkan, Retrieved from <https://www.regeringen.se/debattartiklar/2017/03/sa-ska-vi-skydda-valrorelsen-fran-andra-staters-paverkan/>
- 22) Regeringskansliet (2018, May 4). Action plan: Defending Free Speech – measures to protect journalists, elected representatives and artists from exposure to threats and hatred. Retrieved from <https://www.regeringen.se/informationsmaterial/2018/05/action-plan-defending-free-speech/>
- 23) RFSL (2018, May 18). Sweden adopts hate crime legislation protecting trans people. *RFSL*. Retrieved from <https://www.rfsl.se/en/aktuell/sweden-adopts-hate-crime-legislation-protecting-trans-people/>
- 24) RT News. (2017, May 18). @Sweden Twitter account blocking 14k users is a threat to free speech, activists tell RT. *RT News*. Retrieved from <https://on.rt.com/8c1v>
- 25) Sputnik. (2019, May 7). Swedes Shocked Over 'Orwellian' Hate-o-Mat Supposed to Seek Out Web Abuse *Sputnik news*. Retrieved from <https://sptnkne.ws/mvFf>
- 26) Statens medieråd.(n.d.). Nohate – för dig som vill förebygga näthat bland unga. Retrieved September 3, 2019, from <https://statensmedierad.se/nohate.1295.html>
- 27) Surge in fake Twitter accounts spouting anti-immigrant bile sparks fears of outside interference in Swedish election. (2018, August 30). *Independent*. Retrieved from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sweden-democrats-twitter-elections-interference-misinformation-immigration-a8514791.html>
- 28) The Local (2019, June 26). Landmark case: Swedish court fines man for not deleting hate speech on Facebook. *The Local*. Retrieved from <https://www.thelocal.se/20190626/landmark-case-swedish-court-fines-man-for-not-deleting-hate-speech-from-facebook-group>